

<2021.07.06.(화) 10시부터 활용해주세요>

조희연 교육감 제2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문

미래 교육을 낡은 시대정신 위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 2025 대한민국 미래교육체제(2025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

I. 들어가며

II. 왜 '2025 교육체제' 인가?

- ▶ 1995년의 시대정신, 그리고 5·31 교육체제
 - 5·31 교육체제의 빛과 그림자
 - 양극화 시대, 한계에 부딪힌 5·31 교육체제
- ▶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2025 교육체제'
 - 2025년, 이렇게 바뀝니다.
 - '2025 교육체제' : 계층 분리 교육을 넘어선 다양성 확대
- ▶ 함께 바뀌는 교육과 사회, 그 출발점
 - 세계적 시간과 국가적 시간의 동시성
 - 코로나가 가져온 문명적·사회적 변화와 교육적 성찰
 - 2025 교육체제와 미래사회의 변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개별화, 세계화, 기후 위기
- ▶ '2025 교육체제' 에서 혁신교육을 '혁신미래교육' 으로 전환
 -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교실' 로
 - 교육양극화에 대응하는 평등 교육정책의 강화
 - '지속가능한 포용적 세계' 를 지향하는 세계시민형 민주시민교육
 - 자율과 자치에 기초한 교육행정시스템으로: 자치와 현장 지향성, 행정시스템의 첨단화

III. 서울교육 정책별 성과와 추진 방향

- ▶ 미래: "미래 속에서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학교", "모든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양질의 교육"
- ▶ 상생: 공감과 연대가 살아 숨 쉬는 행복한 공동체
- ▶ 책임: "모두를 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교육"
- ▶ 자치: 학교자율운영체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행정

IV. 결론 및 제언: 더 나은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 ▶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교육의 새로운 전범(典範)을 만들겠습니다.
- ▶ 2025년의 종합적 비전을 구상하고 실현하고자 '2025 혁신미래교육위원회' 를 신설하겠습니다.
- ▶ 차기 대선후보 모두에게 '대학입학제도 및 대학서열화체제 개혁 방안' 을 제안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 '2025 교육체제' ,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일한 지 7년째, 두 번째 임기의 3주년을 맞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위기의 한복판에서, 취임 3주년을 맞는 마음이 엄중합니다. 낮은 도전을 마주한 서울교육이 길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과 학생, 서울교육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관용어로 널리 쓰이는 이 표현에 대해 오늘은 달리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올해가 2021년입니다. 백 년 전이면, 1921년입니다. 일제 강점기인 1921년의 시대정신이 오늘의 교육을 규정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육은 오늘의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합니다. 교실과 운동장에서 자라는 학생들은 오늘을 이해하여 내일을 열어갈 힘을 기릅니다. 자연과 사회의 변화에 열려 있는 학교가 될 때, 오늘을 성찰하고 내일을 단단히 준비하는 학생을 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자연과 사회의 변화에 조용하는 시대정신을 호흡하는 장입니다. 낡은 시대정신을 내뱉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들이마시면서, 학생과 교사, 그리고 사회가 함께 자라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저 역시 모니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온라인 문화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서, 최근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롤(LOL, League of Legends)’이라는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이 게임을 제대로 하려면, 낡은 컴퓨터는 교체해야 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처음 익혔을 때 쓰였던 운영체제 위에선 아예 설치조차 할 수 없더군요. 2011년에 나온 ‘롤’ 게임을 하겠다면서, 1995년에 나온 윈도우95 운영체제를 쓰겠다고 하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우스운 사람이 되겠지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020년대 시대정신을 반영한 교육은, 1990년대에 설계된 교육행정체제에선 작동할 수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유행은 학교가 근본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과제를 앞당겨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생각과 관행,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향하는 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매일, 일상의 업무와 현안에 매몰되어 생활하다가도 우리는 무엇을 해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잘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이 자리도 시대정신을 가늠하고 미래사회가 원하는 변화의 흐름을 살피며 그 속에서 서울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II. 왜 ‘2025 교육체제’ 인가?

저는 2020년 신년사에서 ‘혁신교육 1.0시대’의 긍정성을 계승하고, 그 한계를 넘어 혁신교육 2.0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혁신교육 1.0시대’에서 2.0시대로 이행하는 ‘전환적 도전기’를 맞아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혁신교육 2.0시대’의 중간 목표 지점으로서 ‘2025 교육체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서울교육의 상(像)’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는 ‘혁신교육 2.0시대’로 가는 여정에서 부족한 점을 성찰하고 보완하는 계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 1995년의 시대정신, 그리고 5·31 교육체제

현재 우리의 교육은, 1995년 5·31 교육개혁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 임기 동안 가장 큰 논쟁을 불렀던 자율형사립고 역시 5·31 교육개혁의 결과물입니다. 5·31 교육개혁이 발표된 1995년은 세계화 선언과 함께 OECD 가입이 추진되던 때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부활했고, 5.18 특별법이 제정돼 1980년 광주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또 누구나 쉽게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한 ‘윈도우95 운영체제’가 나오면서, 한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한 시기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겼던 해이기도 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세계화 선언과 함께 대기업이 도약하며, 완고한 권위주의가 약화된 틈으로 개인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욕구가 분출하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 1995년의 사회적 배경에는 명암이 있었습니다. 한편에선 시민의 자유가 확대되고, 권력이 분산되었으나 다른 편에선 무리한 시장화의 야만성을 견제할 힘이 약해졌습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고, 사회적 약자가 살아갈 권리보다는 이윤만을 쫓는 투자자가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를 우선시하는 흐름이 거세졌으나 이를 제동할만한 장치는 없었습니다.

● 5·31 교육체제의 빛과 그림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은 당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합니다. ‘5·31 교육개혁’ 역시 1990년대 중반의 시대정신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제가 ‘5·31 교육체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통상 ‘체제’라는 개념은 여러 부분 요소들이 상호결합되어 일정한 지속성을 갖는 유기체로 작동하고 그 양식이 일정한 특성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냉전체제, 민주화 체제 등이 그 예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해방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교육은 국가주도의 권위주의적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모든 정책 결정을 국가가 주도했고, 그 실행방식도 일방·하향식이었습니다. 그러나

‘5·31 교육체제’로 인해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을 벗어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2000년대, 학생 인권이 강화될 수 있었던 것도, 교육 현장에서 낡은 관성을 깨는 다양한 혁신이 가능해진 것도, 자치와 민주주의가 교육행정과 학교 안에 스며들 수 있었던 것도 모두 ‘5·31 교육체제’가 가져온 긍정적 기여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졌습니다. ‘5·31 교육체제’와 함께 도입된 교육수요자 개념은 대학입시를 중시하는 현실과 맞물리면서,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직업과 직장, 대학이 서열화 돼 있는 사회에서, 학생의 교육 수요란 내면에서 우러난 배움에 대한 갈증이라기보다 인기 직업과 학벌에 대한 요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교육 수요에 대한 존중이란 인기 직업과 학벌을 향한 학생의 경쟁을 교육이 지원해야 한다는 뜻으로 통용되고 이는 경쟁교육과 학교 서열화를 옹호하는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5.31 교육체제는 중앙 집중형 권위주의 국가교육의 완화라는 긍정적 기여의 이면에 시장의 경쟁 원리로서 자율 경쟁의 확장, 즉 ‘교육의 시장화 현상’이 공존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5·31 교육체제’가 가져온 ‘교육의 시장화 현상’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산업화의 ‘성공적 진전’으로 국가의 부는 증대되었으나 모두가 적절한 부를 소유하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부모의 경제적 부를 반영한 교육이 무한경쟁을 낳았습니다. 또한 교육이 계층 상승과 세대 간의 지위를 대물림하는 도구로 작동하게 되면서 이를 양분 삼아 사교육 시장은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반면, 이러한 ‘교육의 시장화’의 흐름에 반대하여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흐름도 존재하였습니다. 이는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의 형태로,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교육민주화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저는 이러한 운동을 ‘학교 민주주의 프로젝트’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 양극화 시대, 한계에 부딪힌 5·31 교육체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전 사회적으로 효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화’가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삼아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의 논리가 전면화되고 적자생존식 글로벌 경쟁의 압력도 거세졌으며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도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대학입시를 향한 경쟁과 신자유주의를 반영한 정부의 교육정책과 맞물리면서 교육 분야에 큰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하에서 민주화의 원리를 도외시키고

시장화의 원리를 극단화한 ‘고교 다양화 300정책’ 이나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 등입니다. 정부가 교육시장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 하위 영역에서의 결과는 더욱 파괴적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중산층 이상의 교육수요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서열화 구조 속 상층부 학교에 가기 위하여 더 치열한 사교육 경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방영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는 이처럼 극단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입시경쟁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당시 1995년은 문민정부가 극복하고자 했던 국가 권위주의적 교육의 단점들이 충분히 극복되지 않아, 여전히 국가에 의한 통제의 유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31 교육개혁’은 중앙정부와 관료 중심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의미에서는 미처 다 극복하지 못한 교육행정의 관료주의와 새로운 민간 자율이라는 시장원리와 결합하면서 더 모순적인 현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교육 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5.31 교육체제’는 과거형 국가주의 관료 통제와 시장의 경쟁적 자율이 결합한 조합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으로 자율성을 누려야 할 학교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자율성은 무시되거나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교육의 영역에서만은 국가 전반에 만연한 경쟁과 시장화의 흐름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2010년, 교육감 직선제 선거 이후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어 촉진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으로 대표되는 진보교육은 ‘5·31 교육체제’의 결핍 지점을 극복하기 위한 지난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양한 개별 정책을 통한 노력이 있었으며 교육운동과 실천도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교육 운동적 실천들이 수렴되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종합적인 교육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언제나 각축의 과정을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가, 어떠한 꿈을 꾸는가에 의해 달라집니다. 이에 서울교육은 미래교육의 전환점으로서 ‘2025 교육체제’에 대해서 새롭게 상상하고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2025 교육체제’

2020년대의 한국은 5·31 교육개혁이 발표됐던 1990년대 중반과 다릅니다. 저는 혁신교육 1.0시대에서 혁신교육 2.0시대로 가는 전환과정에 우리가 놓여있고 다양한 도전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시적 차원에서는 민주화 시대의 ‘전환적 위기’와도 맥을 같이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을 배경으로 하고, 민주화운동을 실천했던 세력이 주도하는 지난 30여 년간의 시기를 민주화 시대라고 부른다면 이 민주화 시대 역시 포스트민주화 시대(민주화 이후 시대)로의 변화과정에서 다양한 ‘전환적 위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민주화 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적 체제에 대한 비전의 결여와 그를 위한 대중적 동력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혁신교육 2.0시대’와 ‘2025 교육체제’는 거시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80년대 이후, 민주화 시대의 ‘전환적 위기’를 넘어서서 포스트민주화 시대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부이자 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스트’라고 일컫는 이유는 이행의 방향과 궤적이 불확정적이고, 주체의 실천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물은 변화·발전한다’거나 ‘패러다임은 변환된다’는 고전적인 명제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 시대를 풍미하던 시대정신이 구조적, 주체적, 우연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역사적 경험으로 체감합니다. 전환적 위기는 해결하는 경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포스트민주화 시대를 결정하는 ‘2025 교육체제’는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의의를 갖게 되고, 이는 다양한 부분 대안적 체제를 형성하고 수렴·종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5 교육체제’는 혁신교육 2.0시대의 중간목표로서 ‘혁신교육 1.0시대’의 전환적 도전을 극복하면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혁신교육 1.0시대에는 아래로부터의 교육혁신운동 뿐 아니라 위로부터도 혁신교육정책 및 행정과 같은 다양한 시도를 해왔고, 그 결과 학교 현장과 교육정책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변화들을 작은 물줄기라고 한다면, 2025년은 교육 본질의 본류로 합수(合水)해가는 중간지점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2025 교육체제’는 ‘5·31 체제’의 교육시장화 원리가 압도하는 상황에서도 길항(拮抗)함으로써 만들어 온 혁신의 물줄기들이 수렴되어 거대한 강을 만들어내는 대전환적 변화일 것이며, 지난 10여 년 동안 5·31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종합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2025년, 이렇게 바뀝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2022 국가교육과정 중등 적용 시작 ▲교육정책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전환 등

이제 2025년을 교육체제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한국 교육의 틀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는 해입니다.

첫 번째로, 2025년에는 모든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합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자율형사립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육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해 나가자 자사고의 길을 걸었는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사고 체제보다 자사고의 옷을 벗을 때 더 교육철학과 교육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고교체제를 다양화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자율형사립고가, 현실에선 교육과정 다양성이나 학교 운영에 있어 강점을 보여주지 못한 채, 오히려 고교체제 서열

화와 그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였기에 결국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자사고 일반고 일괄 전환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통해 소수의 학생이 특권처럼 누리던 다양한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의 다양성 역시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지닌 단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때까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다양해져야 합니다. 100만 명의 학생을 위한 100만 개의 교육과정, 즉 ‘백만 개의 교실’이 제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약속했습니다. 교실 안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기에 자율형사립고는 낡은 제도입니다. ‘5·31 교육체제’에서 강조한 자율과 선택의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운영의 자유, 행정의 재량을 넘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이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취지를 담아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고교학점제는 “체계적이고 개별적인 진로학업설계 지도를 기반으로 학생의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학교 체제별로 추구했다면 이제는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체제를 전환을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어떤 학교에 진학해도 학생은 자신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1 교육체제’ 이후 소수의 학생과 학교에 집중되었던 자율과 선택의 권리가 모든 학생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층과 성적으로 분리된 고등학교에 진학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체제에선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나 중간 이상 성적을 거두는 학생임에도 상대적 빈곤감이나 열패감을 품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정서는 그 자체로도 해롭지만,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더욱 심각합니다. 중간 이하 계층,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생들, 또래 인구의 절반인 그들을 ‘없는 존재’ 취급하는 태도가 학생의 내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와 맞물린 목소리가 실제보다 크게 대표된다면, 민주주의 역시 위협받습니다. 배움에 대한 권리를 확장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일은, 이 같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과목의 개설, 학생의 선택권 보장과 책임 있는 학습이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합니다. 즉, 교사들이 여러 과목을 개설하고 지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외 업무 경감,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 수업권과 평가권 보장, 이를 뒷받침하는 성취평가(절대평가), 교사별 평가제도 확립 이외에 외적 환경으로 다양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공간 확보, 지역 간, 학교 간 격차를 보정할 수 있는 온라인 등 인프라 지원 등의 지원이 필수적인 요건일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이를 온전히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2022년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이 시작됩니다. 교육과정이 개정된다는 것은 학교 교육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전환을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2025년부터 중등(중학교, 고등학교)의 수업평가기록에 근본적인 혁신이 나타날 것 입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따른 고교 평가혁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부터 수업평가혁신은 대학입시부터 멀어야 가능하다는 자조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초등 교실혁명, 중학교 성취평가제 전면도입, 자유학기제 시행, 중학교 석차백분율 폐지로 이어졌던 평가혁신이 드디어 고등학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 전환의 호기를 놓치지 말고, 입시 부담 속에서 왜곡됐던 평가제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끝으로 2025년에는 **교육정책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전환**을 통해 장기적, 효율적, 그리고 지역적 타당성을 지닌 교육정책 수립이 가능한 시스템이 정착될 것입니다.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되면 그동안 교육부에 집중되어 있던 교육에 대한 각종 권한이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가 국가교육과정 및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되고,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 지원에 관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됨으로써 교육자치가 질적 도약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2025 교육체제’ : 계층 분리 교육을 넘어선 다양성 확대**

이와 같이 2025년을 기점으로 서열화 된 고교체제가 사라지고,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 강화되는 등 국가적으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굵직한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5·31 교육체제’에 담겼던 자율과 선택은 본래 취지를 되찾고, 학교를 서열화시켜 온 분리의 벽은 허물어집니다. 이는 ‘5·31 교육체제’의 확장인 동시에 단절을 의미합니다. 즉, ‘백만 명의 학생에게 백만 개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이 비로소 구체화되어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확장이고, 소수를 위한 특권학교 체제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단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2025 교육체제’를 구상하면서 이러한 국가 교육정책이 지역 상황에 맞는 실행 목표와 전략을 찾아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오랫동안 소망해 왔던 바, ‘수직적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로부터 수평적으로 다양한 고교체제’, ‘일등만이 우대받는 교육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교실’, ‘어느 학교에서나 자신의 진로와 적성, 희망에 부응하는 최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은 교육’ 등이 완벽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함께 바뀌는 교육과 사회, 그 출발점

저는 반복해서 ‘교육체제’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교육과 사회가 성장·발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제도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에 걸맞은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는, 새로운 체제 안에서만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95년의 시대정신에서 비롯된 낡은 교육체제 안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란, 최신 소프트웨어를 윈도우95 운영체제에서 구동하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교육은 당대 시대정신과 공명해야 합니다. 가치와 제도가 모두 그러합니다. 그리고 시대정신이 담긴 제도를 만드는 일은, 교육행정만의 몫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일입니다. 이것이 제도를 넘어 체제를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견고한 현재의 고용체제에선, 설령 교육이 바뀌어도 시민과 학생이 더 행복해 지기 어렵습니다. 청소년 및 청년기에 치른 시험 결과가 남은 삶의 질과 생애 소득을 크게 결정하는 구조에선, 입시 경쟁과 동떨어진 교육을 받은 학생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면, 또래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교육개혁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교육과 사회는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2025 교육체제’ 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 세계적 시간과 국가적 시간의 동시성

우선 우리는 ‘국가적 시간과 세계적 시간의 동시성’ 이라는 현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가 마주하는 도전을 우리도 실시간으로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국가적 시간과 세계적 시간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선진국에게 주로 주어졌고, 선진국의 성과를 뒤늦게 학습하는 것이 국가의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이 ‘후발 추격자의 위치’, 즉 모방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한국은 문화적 선도국가이자 경제 대국의 반열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계의 변방 국가에서 중심국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64년 출범 이후 최초로 한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더라도 이제 한국은 모방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선진국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는, 나름의 합리성과 완결성을 지니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와 기후 위기 시대에 대한 대응은 선진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합니다. 이는 국가적 변화가 세계사적 시간의 관점에서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 교육체제’도 국가적 시간으로만 구성되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적 시간에도 조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사회개혁과 국가개혁, 그리고 그 일부로서 교육개혁도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미래 지향성을 내포해야 합니다.

● 코로나가 가져온 문명적·사회적 변화와 교육적 성찰

지난 1년 반 동안 인류는 ‘코로나 19’와 사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명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근원적인 성찰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류의 상호의존성, 만물의 상호의존성, 그리고 개인의 안전과 건강이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과 다르지 않다는 성찰과 감수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생태문명적 인식인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삶의 전 지구적 연결성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동체적 존재’임을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단의 최빈국 주민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때 비로소 뉴욕과 파리의 주민들도 코로나로부터 안심하면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연을 대상화하고 정복주의적 관점을 견지해 온 지난 시기의 산업문명적 폭력성에 대해서도 성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세대인 학생들을 위하여 코로나로 얻게 된 성찰을 교육적 관점에서 구현하여야 합니다.

● 2025 교육체제와 미래사회의 변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개별화, 세계화, 기후 위기

이러한 기본 전제 하에 ‘2025 교육체제’를 사고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미래사회의 주요 변화를 네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말 그대로 ‘지능화된 기계’의 출현입니다. 이는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간주되었던 인간의 지적 능력이 기계와 결합하면서 생산, 소비, 유통 등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 삶의 전 과정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개인의 행위 자료가 빅데이터로 누적되고, 기계학습의 소재가 되며, 딥러닝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둘째, 개별화입니다. 기존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특성이 집단에 종속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개인의 고유성, 지향, 행위 양식이 집단을 넘어 규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삶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개별화 과정은 집단성 속에서 포섭되어 있던 개별성이 분리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취향, 개성, 행위성이 중시되고, 독립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주체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별화에 내재된 ‘개인의 주체성(agency)’에 주목해야 합니다.

셋째, 세계화가 시공간적으로 더욱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흐름은 예전부터 강조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모바일 인터넷의 발전, 비대면 회의 기술의 보편화, 비대면 기술과 결합한 동시통역 기술의 상용화 등 이른바 ‘시공간적 압축(time-space compression)’ 현상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전되면서 지구촌에 산재한 개개인의 온택트(on-tact)와 관계성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경계로 나뉘었던 지구촌의 다양한 집단 간들의 상호관계성이 증대되면서 ‘지구촌’이라고 하는, 세계의 단일세계적 통합성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넷째, 다음은 기후 위기 시대의 도래입니다. 기후 위기는 산업문명이 갖는 자연 파괴적 성격과 석탄 다소비 구조로 인하여 지구가 생태적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는 산업화 시대에 조용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사회구조와 생활구조, 교육체제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면서 기후 위기를 지구의 공통적 의제로 인식하게 합니다.

▶ ‘2025 교육체제’ 에서 혁신교육을 ‘혁신미래교육’ 으로 전환

이러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저는 지난 10여 년 간 진행되어 온 혁신교육을 ‘혁신미래교육’ 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교육체제’ 는 바로 이러한 전환의 중간기착지가 될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키워주는 과정입니다. 미래역량에는 미래형 인지 역량과 관계성과 주체성 등을 강조하는 정서적 역량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이라는 슬로건 하에 여러 정책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25 교육체제’ 에서 혁신교육은 성찰과 보완을 바탕으로 진정한 ‘혁신미래교육’ 으로 재혁신되고, 교육 내용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교실’ 로

‘2025 교육체제’ 는 ‘한 사람만을 위한 교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교실’ 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교실은 ‘일등을 위한 교실’ 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미래 교실은 모든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곳이어야 합니다. 학습이 빠른 학생이건 느린 학생이건, 경제적 조건이 어떠한 간에 학생 개개인의 온전한 성장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교실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개개인의 주체화를 동반하는 개별화의 진전은 근대 산업문명 시대에 조용하는 ‘대량생산 교육’ 을 넘어서, 개개인의 개성과 특성에 맞는 개별주체화 교육을 촉진해야 한다는 막중한 시대적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2020년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백만 명의 학생에 맞춤형 백만 개의 교실’ 이 현실화되는 기반으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교육을 실현케 하는 기술적 도구이자 개별주체화 교육을 촉진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강제된 원격수업 시대의 급속한 도래로 인해 역설적으로 비대면 교수학습 방법의 일상화라는 긍정성을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학습의 끈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술적 조건도 마련되었습니다. 인공지능형 도구들은 학습자의 학습 조건과 속도, 성격에 맞추어, 학생의 학습 환경과 학습 경로를 설계하고 기존의 대량생산형 교육을 넘어, 학습자의 다양성에 조응하는 다양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각자의 재능에 부합하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은 국가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주입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자 스스로 공부하고 책임지는 ‘자율적 책임 학습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부여하는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네트워크 플랫폼이 바탕이 되고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학습을 촉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교사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습 튜터링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며 학습지도에 빅데이터를 도구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획일적인 국가교육과정의 한계를 벗어나 학생 모두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교단위 - 개인별 교육과정(Individual Learning Plan)이 구현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은, 지식노동과 육체노동 간의 전통적인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1차, 2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육체노동이 상당 부분 자동화됐습니다. 과거 숙련 장인이 누렸던 지위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21세기 들어 급격히 발달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머지않아 지식노동자도 이 같은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지식노동시장에서 보다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 벌어지는 현재의 교육 경쟁 역시 변화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교육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길을 찾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교육을 이야기하면, 흔히 창의성 교육도 함께 거론됩니다. 지식노동 가운데 일부가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화된다면, 창의성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인공지능 교육은 과거의 지식 교육과 달리 교육방식 자체도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2025 교육체제’에서 말하는 수업혁신 혹은 교실혁명이란 앞서 언급한 개별주체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부응하는 새로운 창의성 교육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대엔 기존 노동자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노동자를 길러왔던 기존의 교육체제 역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직업에 대한 보상체계, 직장 내 임금체계 등이 함께 변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2025 교육체제’를 둘러싼 사회적 토론은, 이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 교육양극화에 대응하는 평등 교육정책의 강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와 교육 모두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역으로 교육은 평등의 기제로 작용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평등의 가치에 대한 기대가 높고 민주적 역동성이 높습니다. 이런 요구는 특히 교육영역에서 가장 폭넓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적 상식이자 열망이고, 이것이 우리를 전진하게 만든 동력입니다. 이에, ‘2025 교육체제’는 단편적 교육정책의 변화라는 차원을 넘어 교육 양극화에 대응하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나가는 종합적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평적 다양성을 구현하는 고교체제>

먼저, 2025 교육체제는 ‘수직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수평적이고 다양한 고교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학입시에 의해 고교교육이 종속되고, 이에 따라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초등과 중학교 교육을 연쇄적으로 왜곡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교체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고교체제 수준에서 나타나는 수직서열화는 단지 교육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수직 서열화된 구조의 상층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고, 이 경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압도적인 차등적 보상이 주어집니다. 고교, 대학, 직장 모두 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미래역량은 경쟁만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다양성으로부터 배태된 창의성과 협력, 공존으로부터 그 미래역량은 나옵니다. 따라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작동 원리를 수직적 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화로 전환하고, 치열한 경쟁을 완화하여 건강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적 문제를 혁신하여 일등이 아니라도 누구나 노력한 만큼 존중받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개혁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개혁에 앞서 교육개혁이 그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혁신’과 ‘무상’을 넘는 ‘보편적 교육복지 시즌Ⅱ’>

지난 10여 년 동안, ‘혁신교육 1.0시대’의 두 가지 핵심 가치는 ‘혁신’과 ‘무상’이었습니다. ‘혁신’이 일등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교실과 학교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면, ‘무상’은 교육영역에서만큼은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이 주어져야 한다는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2025 교육체제’에서 평등은 더욱 깊고 넓게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무상’이 무상급식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기초학력에 대해 교육청을 포함한 국가책임 실현하는 것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특히, 예기치 않게 찾아온 코로나 상황은 교육격차, 학습중간층의 붕괴, 학습결손, 기초학력 부진 등의 문제를 악화시킴으로써 우리 교육에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5 교육체제’에는 이러한 그늘을 지우고 교육 본질의 가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육 취약계층에게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영역을 맡는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기초학력의 다양한 요인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와 국가가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보편적 교육복지 시즌Ⅱ’라 하고 싶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시즌Ⅰ’이 ‘표준적’ 보편 복지를 지향했다면, 이제는 ‘탈 표준화된’ 보편 복지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무상급식이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교육복지시스템에서는 ‘보편’과 ‘개별’을 조화시키겠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수혜가 주어진다든 측면에서 ‘보편적’이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주어진다든 측면에서 ‘탈 표준화, 개별화된’ 복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존의 교육복지가 취약 학생들을 위한 기본생활 보장 등 생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학습복지 보장’이 핵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학력 사회책임제 >

먼저, 기초학력 보장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보편적 교육복지의 기본입니다. 제가 이를 보편적이라 명명한 이유는 기존 소수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보장정책에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개념을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사회 책임을 명기한 것은 기초학력 문제가 복합적이고 교육의 영역만으로 모든 요인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초학력은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목적으로 추구되어야 합니다. 기초학력은 설령 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보장해야 하는 기본 권리인 ‘인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초적인 언어와 수리 능력, 자연과 사회 및 인간에 대한 이해는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반지성주의적 선동과 반인권적인 여론몰이에 휩쓸리지 않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은 단순 지식을 암기하고 복기해내는 능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힘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역량 그리고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서울교육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학교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그래서 모든 학생이 실제적인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컨대 법정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only one)’로 전제하고 이들의 온전한 성장을 빈틈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확장해나갈 것입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보장은 학습복지의 보편적 제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수월성 교육’에 대한 기회 역시 모든 학생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는 교육이 함양해야 하는 역량을 국가가 책무성을 갖고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학습부진 학생에게는 기초학력 보장으로, 이를 넘어선 학생들에게는 개인의 학습잠재력을 더욱 폭넓게 개발하여 더 높은 수준의 학력을 성취하기

위한 지원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초학력 보장의 문제는 교육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국가를 아우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초학력 부진이 발생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학습 자체의 요인뿐만 아니라 그 외, 교육의 영역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 다층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기초학력 사회책임제’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 탈 표준화된 급식 시대로 >

2021년은 서울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 전, 무상급식 논쟁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생겼고, 복지 예산이 늘어났으며, 복지 제도가 탄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10년 전에는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만큼은 차별 없이, 보편적 기본권으로 접근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배를 채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 역시 ‘보편적 교육복지 시즌II’에서는 표준화된 급식에서 개별화된 급식으로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을 포함해서 많은 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채식, 비건 급식 등등의 선택 급식의 첫발을 떴고 있습니다. 이는 표준화된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개별화된 요구에 부응하는 ‘탈 표준화된’ 급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끝으로 학교 중심의 교육복지에서 학교, 가정, 마을이 함께 하는 ‘3품 교육복지공동체’를 실현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채우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는 학교 중심의 교육복지와 지역사회 등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사회복지,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가족복지 등을 연결시킨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복지 시스템’입니다. 최근 발표한 ‘교육후견인’ 제도가 시험단계이긴 하나 그 의미를 담은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포용적 세계’를 지향하는 세계시민형 민주시민교육

서울시교육청은 삶의 전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로서 일상의 삶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민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 2주년 기자회견의 ‘백만 개의 교실, 하나의 공동체’에서 천명한바, 공동체적 인간이란 편협한 민족주의적 굴레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비전을 품고 지구촌의 이웃과 연대하고 상생하는 시민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란 현재 우리의 삶이 미래세대의 삶에 부

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미래세대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차이를 인정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며,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포용적 사회를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외국 난민에 대한 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태도 등에서 폐쇄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민족주의적 폐쇄성과 편협함을 극복하고 열린 세계시민형 감수성을 미래세대가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를 확인하고 다양한 구성원 간 차이를 인정(tolerance)하는 일, 그들 사이에 활발한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일, 지구의 생존이 나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통해 실천하는 생태문명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일은 미래사회에 안정성과 평화를 가져오는 전제 조건이 될 것이며 지구적 통합의 진전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적 목표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이러한 감수성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지향하는 세계시민형 민주시민은 기존의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체현하는 인간형을 넘어서서 지구촌의 다양한 존재들과 공존·상생하는 미덕을 갖춘 ‘열린 세계시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 시민이며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생태 시민의 모습으로 구체화 됩니다. 이들은 향후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미래인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 **자율과 자치에 기초한 교육행정시스템으로: 자치와 현장 지향성, 행정시스템의 첨단화**

마지막으로 이러한 ‘2025 교육체제’의 내용을 좀 더 탄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시스템 역시 혁신을 통해 ‘자치’의 가치를 구현하고, 최적의 지원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교육’은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교사·교장, 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전달·수렴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예민하고 섬세한 시선이 경직되고 권위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능할 리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교육정책은 ‘교실’과 ‘관(官)’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교사가 교실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官)’이 교육정책을 어떻게 입안해야 할지가 논의의 중심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교실과 ‘관(官)’ 사이의 공간, 즉 학교 현장이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져야 하고, 그 결과가 수렴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돌봄과 방역 등 학교 역할의 확장으로 인해 다양한 직업군이 학교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이 학교 교육의 한 축으로서 협력적 공동체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학교 현장의 자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학교가 ‘만인이 만인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투쟁’의 장이 아니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협

력과 상생의 장' 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모습을 미래세대가 보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 민주주의의 실현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행정의 기술적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다양한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도입되면서 스마트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학교 관리시스템도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그린스쿨' 이 바로 이러한 재구성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활동에 최적화된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업무정상화' 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행정혁신은 바로 행정이 교육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최대한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데 충실히 복무하기 위한 시도였고, 이는 행정혁신 혹은 적극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구현해 왔습니다. 2025 교육체제에서는 이러한 적극적 실험들이 제도화되고 일상화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Ⅲ. 서울교육 정책별 성과와 추진 방향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교육 비전으로 삼고 다양한 미래지향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은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며,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삶을 가꾸는 교육으로서 앞서 기술한 ‘2025 교육체제’를 지지하는 철학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 책임, 상상, 자치라는 네 가지 가치영역으로 구별되어 서울시교육청의 개별 정책 속에 녹아들어 정책을 든든하게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네 가지 가치영역이 2025 체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세부 정책만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전체 구성을 보면, 첫 번째 ‘미래’ 영역은 ▲교실혁명, ▲교육의 디지털 전환, ▲교육공간 혁신, ▲서울형 혁신학교 확산,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등 5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상상’ 영역에는 ▲세계시민형 민주시민교육 강화, ▲생태전환교육 패러다임 전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질적 도약 등 3개 정책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책임’ 영역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사학 공공성 강화, ▲기초학력 보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특수교육 기회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의 완전한 실현으로 구성되었고, 마지막 ‘자치’ 영역은 ▲학교자율운영체제 실질적 구현, ▲교권 증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 등입니다. 이렇게 총 4개 가치, 16대 정책으로 서울시교육청 정책을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정책은 각각의 내용이 많습니다. 이에 정책별 ▲정책의 목표와 방향, ▲정책 성과(2014년부터), ▲코로나 전기(轉機) 정책 변화, ▲추진 현황(2021~) 및 향후 계획은 별도의 자료로 정리·제공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별도 자료의 내용, 특히 ▲추진 현황(2021~) 및 향후 계획 중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몇 가지 정책만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16개의 정책 모두가 여기에 실려 있지 않음을 참고해주시시오.

▶ 미래: “미래 속에서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학교”, “모든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양질의 교육”

주지하다시피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도래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변화의 폭과 속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불확실성과 복잡성은 미래사회를 규정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미래사회는 규격화되고 평균적인 인재가 아니라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적 인재, 협업을 통해 학습하고 스스로 익힌 지식을 지혜롭게 활용함으로써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갖춘 ‘21세기 오디세이형 인간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은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기존의 물리적, 하드웨어적 공간을 넘어 디지털 가상공간까지 포함한 새로운 학습 생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러한 공간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음껏 배우고 개인과 사회의 웰빙(well-being)을 향하여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주체성(student agency)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사회와 미래역량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 속에서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학교’, ‘모든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양질의 교육’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상(像)을 그리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 교실혁명_국제공동수업 활성화 >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지구 공동체가 상생과 공존을 위한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국제 연대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온(on)세상으로 만나는 국제 공동수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PISA 2018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읽기, 수학, 과학 영역의 성적 대비 글로벌 활동과 경험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코로나 현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 공동체 의식이 요구되는 시대적 배경에서 국제공동수업을 새로운 형식으로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대국 언어로 말하기 수업’을 해외 10개국으로 확대하여 초·중·고에서 희망하는 학교 중 100학교를 선정·운영합니다. 이는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교육과정 속에서 10차시 이상의 수업을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수업’ 30교,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업’ 60교도 운영합니다. 특히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업을 위해 1차적으로 60교를 시범 운영한 후, 중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정규수업 및 방과후수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 파트에서 설명하겠지만, 향후 3년간 모든 중학교 국제공동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화상회의용 번역 프로그램을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업하여 개발하고, 해외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도 구축합니다. 국제공동수업 운영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지원할 국제공동수업 지도안을 기존보다 더욱 보강하여 제작하고, 참여교사가 일상적으로 국제공동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사 연수 및 워크숍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제공동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뿐 아니라 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른 나라 학생들과 우의를 다지며 세계가 처한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교육의 디지털 전환_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학습환경 조성 - 서울형 BYOD 가방 쏙! >

이제는 더욱 잘 가르치고, 더욱 잘 배우기 위해 **서울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입니다. 학습용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면 종이책 교과서와 교실의 물리적 환경이 가진 제약을 넘어서

다양한 학습 내용과 정보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새로운 수업과 평가의 설계가 구현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더욱 쉽게 디지털 기록으로 저장·관리될 수 있어 향후 인공지능(AI)의 학습 분석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발로서 내년부터,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을 촉발하는 「서울형 BYOD 가방 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3년간 모든 중학교 신입생과 중학교 교원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세계 각국의 교육환경은 BYOD(Bring Your Own Device)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원 개개인이 자신의 스마트기기를 학교에 가져와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는 아직 우리에게 낯선 환경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 이러한 형태로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교실에서 아직 체험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원격수업 환경에서는 이미 충분히 각자의 기기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배우고 익혀 왔습니다. 이제, 다시 학교로, 그 모습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BYOD로 향할 시대적 요구와 토대를 마련하고자 선생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별로 통일된 학습용 스마트기기가 신입생과 모든 교원에게 지원됩니다. 학습용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보조재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칠판, 서책과 종이, 책상과 의자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교실 수업의 변화이자 수업 매체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우선 학생들의 가방 속 여러 권의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 등으로 전환되어 단 하나의 학습용 스마트기기 속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책가방 무게를 덜어내는 사소한 변화는, 수많은 연쇄적 변화를 촉발할 것입니다. 기존의 교사 중심의 도구 활용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원이 함께 공통의 도구를 활용하는 민주적이고 주체적인 교육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선생님과 학생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방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학습용 스마트기기는 가정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수업 참여가 가정에서의 개별적 학습활동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 학습의 장이 새롭게 확장되는 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소위 예전의 거꾸로 수업 방식 또는 온라인-오프라인 혼합(블렌디드)수업 이라는 방식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가정과 학교가 연계되는 자유로운 학습의 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교수·학습 모형, 평가 모형, 온라인 교육콘텐츠와 플랫폼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사 수준의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사례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혼합(블렌디드)수업 사례와 새로운 방식의 교원과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변화는 단순 수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 전반의 모습을 바꿀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학교 문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은 새로운 문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내는 과제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토론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학습용 스마트기기 활용 방안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에 학교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디지털 문해력이 고양되고 디지털 시민성이 함양될 것입니다.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 측면이 배가되도록, 우려되는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비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기구입과 관리가 학교의 업무가중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공동구매와 통합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습용 스마트기기가 오롯이 학습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수업을 위한 기기 관제 소프트웨어를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용 스마트기기 활용에 충분한 안내가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활용 가이드와 리터러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지자체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교가 겪을 새로운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명	대상	물량	소요액	비고
1인 1스마트기기 지원	중1 학생 전체 중학교 교원 전체	88000대	약 600억원	

< 3. 교육공간 혁신_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25년까지 5개년 간 추진될 계획입니다. 미래교육과정을 연계한 유연하고 다양한 학교공간 조성 및 종합적인 학교 단위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개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 여건과 개별학교의 특화된 교육과정과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의 획일된 학교의 모습이 아닌 새롭고 다양한 미래 학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는 2021년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개별성과 공동체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학교공간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됨은 고무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이상 경과 노후학교가 50% 이상 남아있으며, 1980년대 급격히 증가한 학교 건물의 노후화가 예상되어 지역별 학교별 교육환경 격차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서울교육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서울교육공간혁신 2.0을 위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학교별 공간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각각의 절차 및 분야별 전문가와 접목하여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창의적, 미래지향적 교육 공간을 만들어 모든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공간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교육공간플랜의 세부 실천과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업데이트로 학교 공간이 구성원들의 노력과 함께 진화되고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 진로직업교육 활성화_일반고 전공 탐색 학점제, (가칭)6년을 책임지는 직업계고 >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학점제의 특성화고 적용과 지속적인 직업계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일반고 전공 탐색 학점제, ▲(가칭)6년을 책임지는 직업계고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선, 2022년 특성화고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에 따라 서울형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모형 및 적용 방안을 연구하여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내실있는 직업교육 운영을 통해 학생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학습 기회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일·삶이 조화로운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진학 탐색 및 전공 기초 실습을 위하여 직업계고등학교 전문교과 수업을 이수하는 교육과정인 ‘일반고 전공 탐색 학점제’를 추진합니다. 직업계고-일반고 간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일반고 학생들에게 대학 전공 선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학 진학 희망 학과의 전공 내용을 직업계고에서 먼저 경험함으로써 학교교육의 경계를 확장하고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직업계고의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내실 있는 이론·실습 교과를 학점제로 이수하게 되면 진로 및 학업 설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취업지원센터 역할을 확대하여 서울형 직업계고 졸업생 지원사업으로 ‘(가칭)6년을 책임지는 직업계고’ 사업 추진을 통해 특성화고 입학에서부터 취업까지의 책임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이력 관리와 취업역량 재정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 직업계고 졸업생이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안착하기까지 재직자 특별전형, 일학습 병행제, 기술인재 국비 유학 등 취업 직무 분야 선취업 후학습 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을 통하여 직업계고 학생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입학-취업-후학습 6년을 책임지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 상생: 공감과 연대가 살아 숨 쉬는 행복한 공동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 전체를 근원적으로 성찰하게 되는 중대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현재 삶의 방식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변화 혹은 전환이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기후 위기, 혐오와 차별,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 현대의 문명이 가져온 위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합일’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모두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상태’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과 인간 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감과 연대가 살아 숨 쉬는 행복한 공동체를 위하여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단 하나의 드라이버로 풀 수 없는 복잡한 기계’라는 말처럼 세계화 시대에는 거의 모든 사회경제적 현안들이 지구촌의 각 지역 국가들과 복잡하게 연관되어 다차원적 성격을 띠니다. 코로나19가 단일 국가 차원이 아닌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local)’과 ‘세계(global)’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열린 마음,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글로벌한 의제의 일부라는 인식, 그리고 인간뿐 아니라 생명을 가진 다른 존재의 어려움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해나가는 ‘상생과 연대의 민주시민’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 5. 세계시민형 민주시민교육_토론문화 조성: 토론의 일상화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 >

최근 미래핵심 역량인 창의성, 소통과 협업, 공감, 디지털리터러시 등을 기르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 방법으로 토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토론은 읽기, 생각하기, 쓰기, 말하기의 종합적인 학습 방법으로 사고의 확장(메타 인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인격의 성장 등 배움 및 성장 교육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새로운 지식 창출, 사회적 책임감, 문제(갈등)해결 능력을 신장하는 토론문화 활성화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 다양한 과업과 관심에 대한 의사소통이 공동체와 공통의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토론하는 교실, 토론하는 학교, 토론하는 사회’ 등 ‘토론의 일상화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6. 생태전환교육 패러다임 전환_농산어촌 유학정책 확대 및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추진 >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배움의 장을 서울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시의 학교와 도시 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친화적인 자연환경 속 교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과 함께 농촌유학을 진행하였습니다. ▲농촌의 제2부모인 농가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홈스테이형, ▲지역 활동가와 함께 생활하는 지역 센터형, ▲해당 지역 마을로 가족 전체가 함께 이주하여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81명의 학생이 전라남도의 소규모 학교에서 생태적 삶을 배우고 익히며, 생태감수성 및 생태소양을 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지역의 농·산·어촌으로 유학갈 수 있도록 지역과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10년을 넘어서 기후위기 시대에 조용하는 ‘생태전환먹거리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탄소중립의 가치를 중심으로 학교급식과 교육환경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나친 육식 위주의 식습관이 기후위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육식 섭취를 줄이는 식습관을 실천하는 급식문화를 조성하고자 서울의 모든 학교에서 ‘그린급식의 날’을 운영하고 그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배출 제로학교’를 구현하고자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적극 실천해나가겠습니다.

▶ 책임: “모두를 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교육”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과정에서의 평등’뿐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를 광범위하게 포괄합니다. 미국의 사회철학자인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는 것을 ‘차등적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소 수혜자’란 그가 속한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사람, 즉 정신적·육체적 차원, 그리고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자원과 역량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를 일컫습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의로운 차등 정책’은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등적 정책이 취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의로운 차등정책’은 도덕적 관점에서나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그 정책적 방향과 실천이 타당하다는 사회적 합의 위에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특히 교육의 영역에서 ‘정의로운 차등 정책’은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얻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뤄낸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인종이나 장애,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계층 등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는 환경에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임교육은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 7.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_사립유치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지원 유아 무상교육 실현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교육 취약계층 가정에 더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유아와 특수교육 대상자(이하, ‘특수대상 유아’)에게 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아동들의 거주지 주변에 공립유치원이 부족하여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경우, 유아학비 지원(월 최대 33만원)을 받고,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학부모에게 추가 부담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거주 환경 등으로 인해 공립유치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에게 사립유치원 학비 지원을 확대하여 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구분	서울 평균 학부모부담금(A)	지원금(B)	추가 부담액(A-B)
저소득층 유아	월 338천원	월 100천원	월 238천원
특수교육 대상자	월 338천원	월 164천원	월 174천원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 충족 사립유치원 재원 저소득층 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방과후과정 포함), 급·간식비, 교재 및 재료비

※ 현행 초·중·고등학교의 무상지원(의무교육지원) 범위와 동일

(지원시기) '21년 9월

(지원금액)① 교육비는 유아 1인당 교육과정 258천원, 방과후 과정 80천원을 월 지원 상한선으로 지원, ② 입학금은 유아 1인당 75천원을 지원 상한선으로 유아 교육기간(만3~5세) 중 1회 지원

※ '20학년도 서울 평균 학부모부담금 338천원(교육과정 258천원, 방과후 80천원), 입학금 75천원

※ 학비 확대 지원 시, 교육과정 저소득층 유아 88.5%(239명), 특수교육 대상자 76.0%(38명) 학부모부담금(기본경비) 전액 지원 가능

< 8.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_유아 외국국적 학생 학비 지원 >

현재 초·중·고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 무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유아학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관내 유치원에는 684명('21. 3. 기준)의 외국 국적 유아가 재원 중입니다. 현재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의 유아에게 공립유치원 월 13만원(교육과정 8만원, 방과후과정 5만원), 사립유치원 월 33만원(교육과정 26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의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외국 국적 유아는 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아동들이 국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에서 5세의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근거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이 2021.7.2.에 서울시의회 의결을 통과하였습니다.

< 9. 기초학력 보장_교사의 자발적 기초학력 지도 활동 지원 >

‘키다리샘’ 운영

기초학력 보장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담임(교과)교사입니다. 일과 중, 일과 후, 주말, 방학 등을 활용하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선생님들의 역할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2학기에는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기초학력 지도 활동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키다리샘’을 모집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활동을 희망하는 550여 명의 교사를 ‘키다리샘’으로 지정하여, 기초학력보장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에게는 교육활동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들은 전문적인 기초학력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방학 집중교실’ 운영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방학 중 집중교실’도 운영합니다. 방학 중 집중교실은 교사, 기초학력 지원 강사 등이 기초학력 보장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격차를 메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사전수요조사에서는 공립초 293교(전체 공립초의 52%)에서 운영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방학 학습결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여름방학 기간에도 기초학력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2학기 전면등교 시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입니다.

< 10. 기초학력 보장_3단계 학습안전망 강화를 통해 통합적 지원 강화 >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교실(담임·교과교사)-학교 안(기초학력 다중지원팀)-학교 밖(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으로 이어지는 3단계 학습안전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1단계 교실에서는 담임 또는 교과교사가 모든 학생의 출발점을 다층적·통합적으로 진단-보정-관리하며, 2단계 학교 내 ‘기초학력 다중지원팀’에서는 교사의 노력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교 내·외 자원을 연계해 개별 맞춤형 지원을 하였습니다. 3단계 학교 밖의 서울학습도움센터에서는 학습장애, 정서·행동의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학교와 교사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교-학부모-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보다 전문적인 맞춤형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3단계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11개의 지역학습도움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학습도움센터를 중심으로 위(wee)센터 및 지역의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생의 문제를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 심리, 복지 등의 통합적인 관점으로 진단한 후,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 11. 통합교육 활성화 노력 >

최근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행동 특성을 장애와 비장애로 구분하여 보지 않고 모든 인간이 갖는 다양성의 하나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수학급을 지속해서 확대하며,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하여 보편적 학습설계(UDL,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를 기반으로 모든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층형 학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편적 학습설계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장애물을 제거하고 개별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 목표, 방법,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학습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을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삼으며 배리어프리(Barrier-Free)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건축에서 유래한 용어로 고령자나 장애인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책에서는 계획단계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염두에 두고 추진함으로써 특수교육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12. 보편적 교육복지의 완전한 실현_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통한 보편적 무상급식 체계 완성 >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교육·무상급식을 유치원까지 확장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공교육 무상 원칙이 취학 전 교육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올해부터 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면서 유치원 급식은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급식 환경 개선과 노후기구 교체 등을 위해 총 260개원에 16.8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0년의 친환경 무상급식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유아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지자체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25개 자치구 전체에 구축된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한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치: 학교자율운영체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행정

민주주의란 ‘민(民)이 공적 의사 결정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 하는 자기통치(자치)의 정신 위에 존립합니다. 민주주의는 그 근본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치열하고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가 제도적 차원의 협소한 의미를 넘어서서 일상으로서 생활영역 전반에 관철되는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상’이라는 용어가 말해주듯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천은 생활세계이며 이러한 일상 속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때 새롭게 활력 넘치는 민주주의의 자원이 형성됩니다.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질적인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시적 수준의 민주주의로서 생활 속 자치와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변화의 힘은 위로부터의 정책이 아니라 행위의 주체가 새로운 혁신과 전환을 향해 자발적 동력을 발휘해야 하며, 행정은 이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장(場, platform)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자율운영체제를 학교자치 실현의 핵심으로 삼고 분권과 자율, 민주주의와 공동체성이 발현되는 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참여와 소통의 교육 자치’ 정책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 등 서울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일상의 공간에서 협력과 공존을 바탕으로 한 자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시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회복되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로써 기능할 것입니다.

< 13. 학교자율운영체제 실질적 구현_교육과정 중심의 실질적 학교자치 구현을 위한 혁신자치학교 지원 >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를 통해 확인된 ‘자율과 다양성의 학교혁신 모델’을 바탕으로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교원학습공동체’, ‘학부모회 조례를 통한 학부모 참여와 자치’,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학생자치’ 등 학교 구성원의 자율·자치 역량을 강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또한 교육청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 중심의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학교업무정상화로 대표되는 업무 다이어트, 빨셈행정에도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교육청과 학교의 일상적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수평적 관계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예산, 인사에서의 실질적이고 과감한 학교 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다시 만나는 전면등교를 시도하는 2학기는 교육청의 일괄 지침이나 표준행정에만 의존해 가기엔 그 경우의 수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울의 모든 학교가 ‘자율과 자치’로 저마다의 상황과 조건에 터한 새로운 성장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 성장 로드맵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교육청 모든 공문으로부터의 자율, 법과 제도 내에서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에 대한 최대치의 보장, 학교 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에 바탕한 예산 운영의 자율성이 살려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청이 힘을 뺀 자리에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최적의 교육이 꽃필 수 있도록 하고 그 조건과 경험이 모든 학교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V. 결론 및 제언: 더 나은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저는 ‘2025 교육체제’를 통해 ‘행복과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교육, 특히 ‘5·31 교육체제’는 성공을 위한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전면화된 신자유주의적 경제기조는 이러한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교육에서 이러한 조건은 경쟁에서의 승자가 되는 것이 교육의 목적으로 인식되는 ‘교육의 도구화’를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교육은 성장의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는 교육을 인간의 온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대학입시를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쟁과 승자독식의 성공이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자아실현이며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은 인간이 갖는 잠재성을 최대한 역량으로 발현시키고,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되 그 역할에 차별 없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2025 교육체제’에서 교육은 도구가 아니라 학생들의 지적 성장과 사회적 인격 형성을 위한 행복 실현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교육의 새로운 전범(典範)을 만들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교육의 새로운 전범(典範)을 만들어야 할 필연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차기 대선에서 핵심 쟁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평등한 미래를 향한 대중의 열망이 강력하게 존재하며 이것이 정치에까지 투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평등에 대한 열망은 특히 교육의 영역에서는 더욱 강렬합니다.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다른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신념이 여전히 호소력을 갖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세계에서 더욱 평등한 사회와 교육을 향한 실험이 시도될 수 있는 최전선이며 국민적 열망과 동력도 강력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5 교육체제’는 민주화 시대가 직면하는 전환적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행복하고 평등한 포스트민주화 시대를 여는 개혁의 중요한 일부이자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 2025년의 종합적 비전을 구상하고 실현하고자 ‘2025 혁신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저는 ‘2025 교육체제’를 위하여 ‘2025 혁신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2025 교육체제’의 종합적 비전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실현하는 데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5 혁신미래교육위원회’는 세 분야로 나누어서 ‘2025 국가교육의제 검토위원회’, ‘혁신미래 서울교육위원회’, ‘인공지능 기반 학교 관리 및 행정시스템 혁신위원회’로 구성하여, ‘2025 교육체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실행 로드맵을 세우고 추진할 것입니다.

▶ 차기 대선후보 모두에게 ‘대학입학제도 및 대학서열화체제 개혁 방안’ 을 제안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 교육체제’ 의 성공적 안착과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대학입학제도 및 대학서열화체제 개혁 방안’ 을 차기 대선후보 모두가 제안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서울시민의 성원과 사랑으로 과분하게도 7년 동안 교육감으로서 서울시 전체의 초·중등교육을 관장하고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의 경험을 통해 절감한 것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입학제도, 대학서열화체제에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대학입학제도와 서열화 되어 있는 대학체제는 초·중등교육의 개선을 가로막는 블랙홀이 되어 이것이 개혁되지 않는 한,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찾잔 속의 태풍’ 과 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대학서열화체제의 근본적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춤춤한 대학서열화체제는 그에 걸맞은 대학입학제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먼저 대학서열화체제를 완화해야 대학입학제도도 개선의 여지가 생깁니다. 치열한 대학 입학경쟁은 서열화된 대학체제의 상위 일류대학에 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서열화체제의 근원적 개혁이 절실합니다.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은 대학 서열을 중시하는 인재 채용방식이 낡은 것임을 알고 다양한 역량평가로 그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도 ‘블라인드 채용’ 등으로 구시대적 학벌 중시 관행을 걷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학서열화체제가 공고한 상황에서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치열하게 이어졌지만, 개혁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다 본질적 차원에서 개혁의 메스를 들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교육체제 변화에 대한 거대한 시대적 요청이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입니다. 현행 대학입학제도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2025년 교육정책이 도입되면 고교학점제 등이 제대로 정착할 수 없고, 서열화 된 고교체제는 사라져도 계속해서 가혹한 입시경쟁이 남아있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경쟁 입시구조에서 좋은 교육정책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왜곡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더군다나 망국적인 사교육비 문제해결도 요원합니다. 교육 본질적으로도 총체적인 학생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는 하루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대학입학제도가 개선될 때 초·중등교육도 학생 역량을 제고하는 본질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행 대학체제와 입시제도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2025 교육체제’ 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새 대통령 임기 안에 2025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미 시행이 예정된 2025년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목표한 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대학입학제도 및 대학서열화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대선후보들께 대학입학제도 개선과 대학서열화체제 개혁을 우리 교육주체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자 요청드립니다. 대선후보들의 철학과 정책 방향에 맞는 다양한 대학입학제도 및 대학서열화체제 개혁안이 제안되어

대선기간 동안 치열한 논쟁이 촉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제된 대학입학제도 및 대학서열화체제 개혁안이 모든 후보들의 공약에 담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개혁안’ 이 광범위한 국가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2025 교육체제’ ,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체제는 행위와의 순환적 관계를 통해 변화·성장하게 됩니다. 체제는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만 일방적이지는 않습니다. 개인과 집단이 어떠한 선택과 행위를 하게 되느냐에 따라 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지금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도전과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속에서만이 서울교육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 교육체제’ 를 구축하는 여정에 서울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적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실천해 나가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